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전환점 맞다

민주 안호영 의원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 전북 반도체 시대 문 여는 출발점"

사업장 인근 연결 방식 채택해 송전 거리 대폭 줄여… 사업 실행 가능성 등 확보

수년간 전북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마침내 전환점을 맞았다.

전력 계통 연결이라는 최대 난제가 해결되면서, 새만금은 더 이상 '계획만 있는 땅'이 아닌 실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산업 기반으로 한 발 나아가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 문제 해결은 전북 반도체 시대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총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핵심 축으로, 기업에 안정적인 RE100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전력망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수년간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SK 데이터센터 등 연계 산업 투자도 중단 위기에 놓였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을 이야기해 왔지만, 정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실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 문제 해결이었다"며 "에너지가 없으면 산업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계통 연결 시점은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졌고, 연결 방식 역시 보다 현실적인 구조로 전환됐다.

특히 사업장 인근 연결 방식을 채택해 송전 거리를 대폭 줄이면서,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0.3GW 구간을 분리해 우선 추진함으로써, 준비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일부 구간은 2028년 말 조기 계통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이제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계획 단계에 머무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발전을 전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성과는 정책 접근 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안 위원장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취임 이후, 일괄 추진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 해법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SK, 효성중공업, 한전, 한수원,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를 연쇄적으로 이끌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준비된 구간부터 먼저 추진하자"는 제안이 정부 정책으로 수용되면서, 오랜 기간 정체됐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력 공급 기반이 마련되면서, 전력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SK 데이터센터 사업 재개 가능성도 높아졌다.

데이터센터가 정상화될 경우, 전북은 글로벌 IT 기업의 RE100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 사례를 만들게 된다.

아울러 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해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 연금' 모델도 새만금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가 기업 유치뿐 아니라 지역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되는 셈이다.

안 위원장은 이번 계통 연결 해결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분산 배치 논의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대규모 송전탑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은 이제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새만금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며 "용인에서 수년이 걸릴 일을 전북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계통 연결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말이 아니라 성과로, 구호가 아니라 실력으로 전북의 미래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멈춰 있던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 에너지가 산업으로 이어지고, 일자리로 확장되며, 지역 주민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새만금과 전북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2·3 내란 규명 의정활동 조명

민주 이원택 의원, '대한민국 청렴대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내란 사범 윤석열의 12·3 사태와 관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청렴대상'을 수상했다.

(사)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지난 24일 서울 윤봉길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제6회 대한민국청렴대상 시상식 및 신년하례회'를 열고 12·3 내란 사태 이후 숨겨진 동조 행위를 밝혀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민생 정책 개선을 이끈 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해 이같이 시상했다.

이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도 총기 불출, 유치장 확보, 수사 인력 계엄사 파견 지시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며 이를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숨겨진 내란 가담자 존재를 드러내고, 특검 수사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국회의 책무를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 무분별한 수입 확대와 수급 관리 실패로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곡관리 실패와 농산물 가격 폭락과 재해 대응 부실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농림 및 해양수산 분야 국정감사 성과도 주요 공적으로 꼽혔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어업 민생4법'을 재발의해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과실 없는 재해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12·3 내란 사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헌정 위기다"며 "이번 청렴대상은 내란에 대한 침묵이 아닌 진실 규명, 민생 외면이 아닌 책임 정치를 실천한 의정활동을 국민 앞에 기록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지도 바꾸는 담대한 도전"

장연국 도의회 민주 대표의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연국 대표의원은 26일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북의 지도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을 도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연국 대표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12.3 내란의 잔재 청산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이 전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6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장연국 의원은 전북을 '피지컬 AI·제조로봇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단순 기업 지원을 넘어 사람에게 투자하는 '고용연계형 전북형 공공조달 쿼터제' 도입을 촉구하며, 지역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공공조달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을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수도권 일극 집중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박"이라며,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용수 공급 여건이 풍부한 전북이 대한민국 반도체 전략의 핵심 대안임을 분명히 했다.

전북의 공간 구조를 재편할 '전주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도 제시됐다. 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잇는 제1호선을 축으로 친환경 첨단 교통수단을 결합하고, 전라선 고속화와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한국투자공사 및 7대 공제회 유치를 통한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포함한 K-컬처 관광벨트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책임지는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만호 기자

"임기 내 양질의 일자리 2만개 창출"

'완주군수 출마' 임상규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임상규 완주군수 출마예정자(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완주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경제·일자리 분야 1호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임 출마예정자는 "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었던 경험과 실력으로 완주 경제의 판을 새롭게 짜겠다"며 임기 내 양질의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임 출마예정자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쌓아온 정책 기획력과 중앙정부 인맥을 완주 발전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봉동읍 일대 약 50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2030년 목표보다 앞당겨 조기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두루 거친 네트워크를 활용해 100개 이상의 우수 기업을 조기에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산업 전략도 한 단계 진화시켰다. 기존 현대자동차, KCC 등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나아가 피지컬 AI(Physical AI)와 그린 모빌리티를 연계한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 출마예정자는 전북 행정부지사 재임 시절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시켰던 성과를 완주에 접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새만금의 생산 기반과 완주의 수소·부품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완주를 대한민국 최대의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일은 새만금에서 하고, 거주와 교육은 완주에서 이루어지는 광역 경제권 중심 도시 완주"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편 임상규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오는 31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저서 '임상규의 오직 완주' 출판기념회를 열고 군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완주=염재복기자

도의회 의원 6명, 5분 발언 잇따라

"민선8기 도정, 투명·책임 행정과 괴리"

완주-전주 행정통합 정치권 발언 비판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 대응 촉구

김슬지 의원

권요안 의원

임종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이재 의원

김성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6명이 2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이어갔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민선 8기 전북도정이 국민주권 시대가 요구하는 투명·책임 행정과 괴리된 도정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빈 공약과 성과 부풀리기, 보여주기 행정으로는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새만금 디즈니랜드'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싱가포르 센토사, 두바이를 연상케 하는 개발을 약속했고, 2024년 업무협약 체결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 어떤 실체도 남아 있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대표 성과로 홍보된 기업유치 실적 역시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전북도는 17조 원 투자유치와 약 2만 개 일자리 창출을 홍보해 왔지만, 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실제 투자 실적은 6,880억 원, 일자리는 78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과와 관련해 전북도가 발표한 5,800만 달러 수출계약 중 실제 수출액은 565만 달러로 실행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최근 정치권의 발언과 압박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민 동의와 숙의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1월 5일 전북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완주-전주 통합은 안호영 의원의 결단에 달렸다"고 발언한 데 대해, "행정통합은 국회의원 개인의 결단으로 좌우될 사안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지역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내 전 시·군으로의 단계적 센터 확충 로드맵 마련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촉구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와 관련된 전북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360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최대 19만 2,000명의 고용 창출과 480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는 장기간 답보 상태인 새만금 개발 사업과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덧붙였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26일 새만금 신항만의 제8대 기항지 선정에 따른 크루즈 산업 육성방안 마련 및 철저한 사전대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항지 선정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10만 톤급 이상의 대형 크루즈선을 유치할 수 없다"며, "준비 여하에 따라 새만금은 스쳐 지나가는 항구가 될 수도, 머물고 싶은 명품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도내 전통사찰이 관리와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통사찰 관리 체계의 양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전통사찰 토지 지목 현황 전수 조사 및 종교용지 전환 지원, 화재보험 미가입 사찰에 대한 단계적 가입 유도 및 지원 방안 마련, 전통사찰의 보존과 안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종합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이만호기자

전북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도지사·교육감 14억5900만원, 기초단체장 평균 1억67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도지사·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5,900만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200만원정도 증가했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6,7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3억1,700만원인 전주시장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1,900만원인 무주군수선거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5,400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500만원이다.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억4,600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5,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5년 10월 23일) 또는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